

한반도 동향

2023년 6월

- I. 한반도 일지
- II. 북한 매체 주요 보도
 - 1. 대 내
 - 2. 대 외

편집책임	장철운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김세라 경영지원실 연구원
작성 자	권주현 북한연구실 연구원	안정은 기획조정실 연구원
	김아영 인도협력연구실 전문연구원	윤훈희 인도협력연구실 전문연구원
	용혜민 평화연구실 연구원	
	탁민지 기획조정실 연구원	

이 달의 주요 동향

한국

尹대통령 ‘한미 2023 화력격멸훈련’ 참관 ... BIE총회(佛) 참석 및 베트남 국민방문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공개 ... 신임 통일부 장관 지명 및 차관 임명

북한

당중앙위 8기 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및 8기 15차 정치국회의 개최
 국방성 대변인, 한미 화력격멸훈련 경고임장 발표 ...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 발사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 방중 ... “중국, 북핵 견제 약속 없었지만 그렇게 하게 될 것”
 핵잠수함 ‘미시건함’ 부산 입항 ... 오스틴 국방장관 방일 및 미·일 확장억제대화 개최

중국

중·러 동해 등에서 제6차 연합 공중 전략순찰 실시
 온두라스(대만과 단교)와 국교정상화 및 정상회담 개최 ... 독일, 베트남, 뉴질랜드 등과 총리회담

러시아

벨라루스에 러 전술핵 배치 ... 바그너그룹 무장 반란 시도·실패
 북한에 나진-하산 철도 운송 확대 제안

일본

기시다 총리 ‘북일정상회담 빠른 실현 위해 직접 고위급 협의 실행할 것’
 화이트리스트에 韓 추가 ... IAEA,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포괄적 점검 진행 완료

I

한반도 일지

일자	구분	주요 내용
6. 1. (목)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진행 - 산업미술법, 직업기술교육법, 보통교육법, 수출입상품검사법 채택
	북한-대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 유엔 안보리의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규탄 관련 담화(조선중앙통신) - “우리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억지논리는 우리 국가의 우주리용 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부당하게 억압하는 분명코 날강도적이고 잘못된 것”이며 “군사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궤도에 정확히 진입하여 임무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 • 김선경 외무성 부상, 한·미·일 해상차단훈련 관련 비난 담화(조선중앙통신) - “우리 국가를 상대로 그 어떤 적대적인 봉쇄행위를 기도하거나 우리의 신성한 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려 든다면 공화국 무력은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적대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함.
	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보니 젠킨스 美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면담(서울) - 양 차관은 △북한의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등 한반도 정세, △한·미 확장억제 협력 강화, △지역·글로벌 정세 등에 관해 의견 교환 - 북한의 위성 명목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 발사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효과적인 대북 억제 및 대응을 위한 한·미 및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 - 전례없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워싱턴 선언」을 통해 마련된 획기적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한·미가 함께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 합치 - 이와 관련, 연내 차기 제4차 한·미 외교·국방 차관급 회의(EDSCG)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 합의 - 젠킨스 차관, 별도 개최된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우주발사체(천리마-1형) 발사와 관련해 추가 대북제재 방안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이번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며 매우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것 때문에 추가로 대북제재가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 -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 조달 활동과 관련해서는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산 행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을 대고 있고, 가상화폐도 그중 하나”라며 “가상화폐를 포함한 불법적 활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든 “北 위협에 한·미·일 3자 협력 심화…中과 대결 추구 안 해” - 바이든 대통령,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세계 곳곳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발언 - “인도·태평양에서 우린 동맹인 일본 및 한국과의 3자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며 “북한 등 역내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 - 또한 “이전엔 없었던 자유롭고 개방되며 번영하고 안전한 인태 발전을 위해 호주, 인도, 일본, 미국을 하나로 묶는 쿼드(Quad)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 • 미국-대만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협정 서명(워싱턴) - 세관 업무 간소화 및 규제 개선, 물류시간 단축 등의 내용 포함 - 中 외교부 대변인, “중국어와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와 ‘중국의 대만 지역’의 공식 교류(interaction)에 반대…미·중 공동성명 위반”

일자	구분	주요 내용
6. 1. (목)	미·일	<p>〈 오스틴 美 국방장관 방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틴 국방장관-기시다 총리 면담(일본 도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안전보장환경이 더욱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 일본은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와 동맹의 억지력·대처력 강화를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미·일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 - 美, '미일안보조약 하에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책임(commitment)을 다시 한 번 확인' - 양국은 미국의 확장역지에 대한 논의를 한층 더 강화할 것에 대한 협력을 지속할 것에 의견 일치 • 미·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일본 도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틴 장관과 하마다 방위상, 5월 31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해 위성을 발사한 것을 규탄하고 한·미·일 3국이 경계와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는 인식 공유 - 오스틴 장관, 북한의 위성 발사는 "지속적인 도발 행위"라고 지적하고 "미국 본토와 동맹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역설 - 하마다 방위상, "북한이 한층 더한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미·일,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도발 행위에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언급 -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한국, 호주와 협력하겠다는 방침도 확인 • 오스틴 국방장관-하야시 외무장관 회담 개최(일본 도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패권주의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논의
	U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O(국제해사기구) 산하 해사안전위원회,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 사상 첫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 사전 통보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국제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적이고 사전 통지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라고 규탄 - 실질 제재 수단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으나, 북한 압박 가중 및 국제사회의 '단합 대응'이라는 상징적 효과
6. 2. (금)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국제아동절 73주년 기념 친선연환모임 진행(6.1., 대성산유원지)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수길(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성학(내각 부총리), 김승두(교육위원회 위원장), 최희태(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참석, 김정순(여맹중앙위 위원장) 발언 • 장애어린이의 6.1국제아동절 기념모임 진행(6.1., 대동강구역과외청소년체육학교 체육관)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창일(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 위원장) 등 참석
	북한-대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 유엔 사무총장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규탄 성명에 대한 비난 담화(조선중앙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군사적 위협에 대한 논리적이고 당위적인 반응이며 자주권과 영토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주권국가의 보편적인 방위적 권리 행사"이며 북한은 "주권적 권리를 계속 정당하게 행사"할 것
	한국	<p>〈 이종섭 국방부 장관,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 참가(6.2.~4., 싱가포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일 국방장관회담(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국 장관은 유엔안보리결의(UNSCR)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결의(UNSCR)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올해 안에 가동 합의,

일자	구분	주요 내용
6. 2. (금)	한국	<p>△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하여 3국 간의 조율과 협력을 촉진할 것을 재확인,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정상화를 환영, △해양차단훈련, 대해적훈련을 신속히 재개하자는 약속 재확인, △재해재난 대응 및 인도적지원 등 3자 협력 확대가 가능한 분야를 추가 식별해 나가기로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네덜란드 국방장관회담(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협력 양해각서(MOU) 협의 진행 등 양국 간의 긴밀한 국방협력 관계 평가 - 네덜란드가 주최한 국제사이버대회 '사이버넷(CyberNet)'에서 한국군이 2년 연속 우승한 것을 평가하면서, 양국 간의 사이버 분야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 • 한·EU 장관급 회담(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이루어진 한·EU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국방·안보 관련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 - 이종섭 장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하여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의 위협 억제 및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EU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 • 한·캐나다 국방장관회담(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제재 이행 및 유엔사 임무 등 국방·안보 분야에서 그간 긴밀히 공조해 왔음을 평가하고, 방위산업 등 향후 협력의 외연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에 합의 • 한·중 국방장관회담(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와 양국 국방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 - 상호존중과 호혜적인 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를 국방 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해 고위급 상호방문 및 전략대화, 각 군 간 인적교류를 포함한 교류협력을 재개하고, 국방협력 MOU 개정을 통해 국방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 • 한·일 국방장관회담(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 5월 31일 북한의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당국 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협력 증진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 합치 - 이종섭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초계기) 문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무 협의부터 시작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구축함이 근처로 날아온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 • 한·독 국방장관회담(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 독일의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면서, 양국이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오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음을 평가 - 양 장관은 양국 해군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며, 올해 하반기 양국 해군의 상호 기항, 다국적 훈련 공동 참여 등을 통해 군사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

일자	구분	주요 내용
6. 2. (금)	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참·주한미군사령부, 「한미 사이버보안 공동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 한·미 군 당국 간 최초로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명시한 합의각서를 교환 -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와 미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한국전구 범세계연합정보교환체계(CENTRIXS-K) 간의 안정적 연동을 보장하는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北 핵위협 고조…워싱턴 선언, 美의 새 역지역량 강화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군축협회 연례 회의 연설에서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 핵 위협 중 하나로 지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확장역량의 중요성을 강조 - 이어 “김정은은 세계 최대 핵 강국을 목표로 한다면서 전술핵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모든 종류의 역량을 증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며 “김정은은 핵 비보유국 가운데 북한을 첫 보유국으로 천명하는 법을 발표했는데, 이는 직접적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이후 어느 시기보다 빈번하게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 • 하원 외교위원장 등, “한국 기업, 마이크론 매출 가져가지 말아야…동맹 약화될 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마이크론이 중국의 부당한 보이콧으로 잃은 매출을 가져가 마이크론을 약화하지 않도록 신속히 일본, 한국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
	U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관한 공개회의 개최…규탄 성명,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 등 공식 대응 합의 없이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1형’을 발사(5.31.)한 것을 계기로 개최 - 중·러, 한·미 연합훈련 언급하며 한미동맹이 대북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ALPS처리수 해양 방출에 대한 IAEA의 포괄적 점검 진행 (5.29.~6.2.)
6. 3. (토)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6차 전원회의 진행(6.2., 만수대)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룡해(위원장) 사회, 강윤석, 김호철(이상 부위원장), 고길선(서기장) 등 참석 - 국토계획법, 간석지법, 상수도법, 하수도법의 수정보충 및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선거
	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진 외교부 장관, 美 상원의원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 장관, 방한 중인 덴 설리번 미 상원의원과 우리 정상 국빈방미 성과, 한미동맹 발전, 지역 및 국제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6. 4. (일)	북한-대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상정 비난 담화(조선중앙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 발사는 “이미 한계선을 넘어선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한 응당한 대응조치이며 자주권과 령토 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권 행사”이고, “주권국가의 모든 합법적 권리들을 행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것”
6. 5. (월)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부, “북한, 지난해 사이버 공격으로 최대 10억 달러 탈취…불법 WMD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부 대변인, 북한 사이버 위협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전문가패널과 다수의 업계 보고서를 인용해 2017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10억 달러에서 23억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훔친 자금으로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지적 - 이어 미국 정부가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를 통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동맹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

일자	구분	주요 내용
6. 5. (월)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5일 주온두라스 중국대사관, 6월 11일 주중 온두라스대사관 개소...온두라스는 지난 3월 대만과 단교 후 중국과 수교
6. 6. (화)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덕훈(내각 총리), 평안도 농장 및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대안천선유리공장, 대안중기계 연합소 등 현지요해 전국소년단원 편지증정모임 진행(6.5., 만경대혁명학원)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일환(당중앙위 비서), 김수길(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리두성(당중앙위 부장), 김성봉(만경대혁명학원 원장) 등 참석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韓, 2024~20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0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 이는 1996~1997년, 2013~20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며, 이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개시는 2024년 1월 1일에 이루어짐. 합참, "중·러 군용기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 후 이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남해 및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한 후 이탈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힘.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차관, "안보리 마비로 어렵지만 北 제재위반 용납 안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CNAS 주최 대담에서 안보리가 마비된 상황에서 북한이 최근 우주 발사를 한 데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다른 상임이사국과 협력하지 않아 어렵다면서 "우리는 기존 제재를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유사입장국과 협력해 국가들이 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답변 CRS, 미국 국방 인프라 보고서 발간 "북 미사일 능력 향상...필리핀도 사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조사국(CRS),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국방 인프라(U.S. Defense Infrastructure in the Indo-Pacific)' 보고서를 발간, 목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미군 현황을 소개하고 전력 배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시사점 등을 도출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이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미사일은 한국, 일본 전역 그리고 필리핀 북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명시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이 북한의 안보우려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우려도 고려해야 한다는 韓 정부관계자 발언에 대해) 중국은 모두를 우려하는 균형잡힌 시각을 견지...(워싱턴선언에 대해) 중국은 불력을 형성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관련국들의 군사 연습을 반대'
	중·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러 제6차 연합 공중 전략순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일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실시, 중·러 군용기 8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후 이탈 7일 태평양 서부 공역에서 실시, 일본 주변 비행 韓 국방부,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 항의...사전통보 없이 우리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 우리 영공에 근접하여 민감한 지역을 비행한 데 대해 유감'...中, '(KADIZ 진입에 대한 우리측에 경고에 대해) 통상적 훈련' 日 외교부, '중국 외교부 및 주일 중국대사관, 주일 러시아대사관에 항의'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야시 외교장관 정례 기자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WHO 집행이사국 선출에 대해) '새로운 집행이사국이 WHO 이념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해나갈 것'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일부 국가의 소극적 자세로 북한의 결의위반 행위에 대해 행동할 수 없어 유감...향후 대응은 일본의 독자적 조치를 포함하여, 미국·한국과 연계하면서 검토할 것' 	

일자	구분	주요 내용
6. 6. (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헤르손주의 카오후카 댐 붕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댐을 폭파했다고 주장하며 ICC 조사 요청 (6.11. 조사 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UN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하고 재난 대응 시스템인 '시민 보호 메커니즘' 가동 요청 - IAEA에 러시아 테러 문제를 이사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달라 요구하고 특히 러시아 미사일 산업과 핵 부문 관련, 러시아에 새로운 광범위한 제재 부과를 긴급히 고려할 것을 G7 및 EU에 호소 - NATO·EU, 댐 폭파는 사실상 러시아 소행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소년단 창립 77주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호 방사포 증정 - 《혁명학원체육경기-2023》진행(6.4.~6.) 보도 -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고마운 우리 해님》진행(6.6.,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및 리두성(당 중앙위 부장), 문철(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중앙위 위원장) 등 참석 보도
6. 7. (수)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안보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안보전략'은 외교·통일·국방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정부 출범시마다 변화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발간 - 미·중 간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신안보 이슈(공급망 불안·기후 변화·팬데믹·사이버 위협 등)의 부상과 같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심도있게 평가 - 총 8개 장으로 구성, 3대 목표로 '국가 주권·영토 수호와 국민 안전 증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미래 준비', '동아시아 번영의 기틀 마련과 글로벌 역할 확대' 등을 제시했으며, 외교·국방·남북관계·경제·신안보 등 5개 분야별 전략 기조 소개 -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중전선언', '평화협정' 삭제, △일본 과거사 문제 '단호히 대처' 삭제, △중국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삭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북한의 위협을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으로 명시, △국가별 언급 순서는 일·중·러 순 • 국방부, 중·러 군용기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에 엄중 항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6.6.) 관련, 주한 중국 국방무관 및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 촉구 - 국방부는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 우리 영공에 근접하여 민감한 지역을 비행한 데 대해 양국에 유감을 표명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정부 교체기 안보 전문가 대상 악성 전자우편 유포사건, 北 소행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해킹조직은 통일·안보 전문가 등을 사칭하여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새 정부 출범 기간에 맞춰 전·현직 고위공무원, 대학교수, 외교·통일·안보·국방 전문가 등 150명을 대상으로,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여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악성 전자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 - 사칭 전자우편에 속아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피해자는 총 9명으로 확인되었고, 북한 해킹조직은 이들의 송수신 전자우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첨부 문서와 주소록 등을 빼간 것으로 파악 -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그간 국내외 민간 보안업체에서 일명 '김수키(Kimsuky)' 등으로 명명한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공격에 사용한 아이피(IP) 주소 △경유지 구축 방법 △북한식 어휘 문구 △공격 대상이 대부분 외교·통일·안보·국방 전문가인 점 등을 근거로 판단하였다고 밝힘. • 한·이스라엘 외교장관 회담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진 외교부 장관,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양국 관계 △경제통상, 과학기술, 스타트업, 문화·인적교류 등 실질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 양 장관은 한국이 중동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이스라엘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인 한-이스라엘 FTA가 작년 말 발효되어 교역과 투자 확대 기반이 마련된 것을 환영

일자	구분	주요 내용
6. 7. (수)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한·폴란드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섭 국방부 장관, 마리우슈 부아쉬차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폴란드 수출예정인 FA-50 GF 전투기의 최초 출고식 행사에 참석 및 공동위원회 개최 - 양 장관은 지난 회담에서 합의한 장관급 정례협의체인 '한·폴란드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 신설 관련 양해각서(MOU)를 서명하고, 최초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원 외교위원장, 北 WHO 이사국 선출에 "공산당 영향력"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클 매클 외교위원장, 성명에서 "북한의 WHO 집행이사국 선출은 공산당이 WHO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WHO가 자체 정책과 훌륭한 거버넌스 기준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대변인 정례기자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이 주장하는 만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깨끗하다면, 왜 일본은 이를 국내 호수에 버리지 않는가...일본이 해양방류를 주장하는 이유는 가장 저비용이며, 일본 국내에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 • 중국·이란·파키스탄 국장급 대테러협의 개최...3국 대테러 안보협의 제도화 합의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차관 정례기자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치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물밑접촉을 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북한과의 접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향후 교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밝히지 않겠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우크라이나의 재건, 복원을 지원하는 4년짜리 국가 지원 프로그램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가 OECD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정책과 관행을 갖추고, EU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발표 •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관련,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국 및 전문가 대상 화상회의 개최
6. 8. (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진 외교부 장관, 레소토 외교국제관계부 장관 및 공공사업교통부 장관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 장관과 레조니 음포조아니 외교국제관계부 장관, 네오 맛짜토 모티아네 공공사업교통부 장관은 양국 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 및 국제무대 협력에 대해 의견 교환
	한·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 중국대사-이재명 대표 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현재 어려운 한·중관계의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음...한국도 중국의 핵심 관심 사항을 존중해주길 바램...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 韓 외교부 1차관, 주한중국대사 초치 및 강력 유감 표명 - 中 외교부 대변인, '현재 한·중관계의 어려움과 도전은 중국으로부터 유발된 것은 아님...한국의 유관기관이 어떻게 한·중관계의 문제에 직면하고, 안정성과 증진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 고려해주길 바램'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원, 초당적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원에서 미·한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목적의 '코리아 코커스'를 결성, 민주당의 존 오소프 의원과 브라이언 샷츠 의원,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과 토드 영 의원이 참여 - 존 오소프 상원의원실, 보도자료를 통해 "이 코커스는 미·한 양국 간의 경제, 안보, 문화, 과학적 유대를 심화하는 정책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공개

일자	구분	주요 내용
6. 8. (목)	미·일·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日·台, 해상정찰 드론 실시간 데이터 공유할 것(익명 소식통 인용 보도) - 中 외교부 대변인,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들의 대만 지역과의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접촉도 반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외무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벨라루스에 금, 시멘트, 나무, 고무 등의 수입 금지 및 생화학 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재화, 기술, 재료 등과 함께 지폐, 기계류 수출 금지 등 추가 제재 적용 발표 - 소셜미디어 업체 등과 함께 벨라루스 언론 기관의 웹사이트 접속을 제한해서 영국 내 선전이 퍼지는 것을 차단하고, 벨라루스인들이 영국 금융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추가 제한하는 등 제재 회피를 단속하는 조치도 시행 예정 • EU, 룩셈부르크에서 내무장관 회의를 열어 내부분열의 요소였던 난민수용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새 정책에 잠정 합의 -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이주민에 대한 27개 회원국의 의무를 담은 합의안은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EU 외부 국경에 도착한 난민 신청자를 회원국들이 나눠서 받아들이거나, 1인당 2만 유로(약 2천800만 원)를 EU 대책기금에 보탠다는 내용
6. 9. (금)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호주·영국·캐나다·일본·뉴질랜드, '무역 관련 경제적 강압과 비시장 정책·관행 반대 공동성명' 채택 - 미국무역대표부, 미국 등 6개국 정부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장관회의에서 무역 관련 경제적 강압과 비시장 정책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발표 - 성명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우려하는 활동으로 제시한 지나친 보조금과 국가 통제 기업의 반경쟁적 활동, 정당화할 수 없는 규제 적용 등의 내용 포함 - 中 외교부 대변인, '해당 성명이 중국을 겨냥했다는 의견에 대해) 공동성명의 내용은 마치 미국 자신(의 무역 관행)을 설명하는 듯하다'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 '중국과 쿠바가 미국에 정보수집시설(spy facility)를 설치하려 한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는 거짓'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다 총리, 방일한 아랍에미리트연합 외교장관 접견 - 일본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법의 지배를 중시하며,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협력을 포함하여 양국 간 긴밀한 연계를 지속할 것 • '개발협력대강' 각의결정 - 2022년 12월 발표된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따라 새로운 개발협력대강 설정 - 개발협력을 한층 효과적·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형태의 ODA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강조 - 하야시 외무상 정례기자회견, '(새로운 개발협력대강이 군사목적 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비군사원칙을 엄수하고, 모니터링 및 수여국의 상황 확인을 철저히 수행하여 적절한 이용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일·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우크라이나 정상 전화회담 개최 - 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댐 공격으로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500만 달러의 긴급 인도지원을 국제기구를 통해 실시할 것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과 러시아 외무차관, 제네바에서 만나 7월 17일 만기인 흑해 곡물협정 재연장 문제 논의
6. 10. (토)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학원원아들의 체육경기-2023 진행(6.4.~9., 평성시) 보도 - 김승두(교육위 위원장), 리성범(평안남도 인민위 위원장) 참석

일자	구분	주요 내용
6. 12. (월)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덕훈(내각 총리), 황해북도, 평안남도 농업부분 사업 현지요해
	북한-대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러시아 국경절 기념 축전 발송(6.12.) 보도 - “조로 친선은 우리 두 나라의 소중한 전략적 자산이며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린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승화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참, “北 발사체 추락 해역서 中 함정 활동” - “(군은)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km 지점에서 인양작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수역은 공해”...“그 공해상에서 중국 군함들이 일부 활동”
	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화생방 부대, 北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연합훈련 - 美 인도태평양사령부, 美 제1지역의학연구소 소속 장병들이 최근 서울 외곽에서 국방부 직할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부대원들과 함께 훈련했다고 밝힘. - 양국 화생방 부대는 이번 훈련에서 샘플 공유, 장비 상호운용성, 통신 및 기술 분석을 위한 사전 조정 등을 점검했으며 이동식 방사선 실험실을 둘러보며 장비 및 소프트웨어 사용, 정밀 분석 및 안전 지침에 대해서 논의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온두라스, 국교정상화 이후 첫 정상회담 개최(중국 베이징) - 양국 관계 발전의 최우선 전제조건이자 정치적 기반은 ‘하나의 중국’...중국은 온두라스에 맞는 발전방향을 지지하며, 온두라스에 대한 어떠한 내정간섭에도 반대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UAE 외교장관 회담(일본 도쿄) - 방위분야에서의 협력 및 우크라이나 정세, 중동 정세,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의견 교환
6. 13. (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에서 NATO 사상 최대 방공훈련(6.12.~23.) 실시 - 독일 주도로 25개국이 참여, 나토군 1만여 명, 미 전투기 등 공군항공기 100대, 독일 연방군 항공기 70대를 비롯해 모두 250대 전투기 및 항공기 동원 -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2023년도 연감(SIPRI Yearbook)에서 북한의 핵탄두 보유수가 30기로 1년 전보다 5기 증가, 조립 가능한 핵탄두 수는 50~70기 추산치 발표 - 4월 미국과학자연맹(FAS)이 발표한 추산치 ‘30기 이상’과 일치하며, 전 세계적으로 핵탄두 수가 감소했으나, 북한은 러-우크라 전쟁 등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속에 중국을 중심으로 ‘사용 가능한’ 핵탄두 수가 증가했다고 집계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尹 대통령, “싱하이밍, 상호존중 태도 있는지 의심...국민이 불쾌”(비공개 국무회의) - “싱하이밍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싱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함. • 외교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도적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 문제”(정례브리핑) - 지난 8일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 관련, 중국 외교부의 싱 대사 두둔에 대한 입장에 “우리 정부는 주한 대사가 정치인을 접촉한 것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힘. - 대변인은 싱 대사의 발언이 외교사절의 우호 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빈 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나며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 간섭에 해당될 수 있어 엄중히 경고했다는 기존 입장을 밝힘. • 제1차 한·UAE 외교장관 간 특별전략대화 개최 - 박진 외교부 장관,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외교장관과 특별전략대화 개최 - 양 장관은 양국관계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고위급 교류가 최근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난 1월 양 정상에 약속한 투자, 방산, 원자력, 에너지 등 4대 핵심 분야 협력을 최우선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일자	구분	주요 내용
6. 13. (화)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한·사우디아라비아 군사협력위원회 개최(6.1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이영수 공군중장, 사우니 총참모부 참모장 하미드 알아므리 공군소장을 대표로 양국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 - △안보정세 평가, △군사교류 활성화, △교육훈련 협력, △방산협력 등 주요 의제를 논의
	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北 불법 사이버활동 대응 논의(미국 워싱턴 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브라이언 넬슨 테러·금융정보 차관,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한 한·미 협력을 강화하기로 논의 - 또한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가상자산 탈취와 IT(정보기술) 분야 외화벌이 활동 때문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원 군사위원회, 北 미사일 위협 증대에 美 본토 미사일방어 옵션 보고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원 군사위원회 마이크 로저스 위원장, 주한미군 규모와 확장억제 제공 방침 내용이 들어간 위원장 초안 발표 - 초안은 한국과 관련,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체결한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약 2만 8천500명의 주한미군과 모든 범위의 미국의 방어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을 포함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언급 - 또한 미국 본토 방어와 관련, 북한의 미사일 능력 증대에 따른 위협을 거론하면서 내년 3월까지 미사일방어청에 현재 상황 평가와 함께 미사일 방어(MD) 옵션에 대해 보고할 것도 요구 •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탈북민 강제송환’ 청문회 개최(미국 워싱턴 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중국 내 탈북민들의 임박한 강제 송환 위협(North Korean Refugees and the Imminent Danger of Forced Repatriation from China)’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 - 청문회에서는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민이 직면한 인권 침해를 해결하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복송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크리스 스미스 CECC 공동의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중국 정부가 난민들(탈북민)을 강제로 송환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고 촉구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시다 총리 정례 기자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북한에 대화를 요구하는 압력을 더욱 가할 것...명확한 기한을 설정할 수는 없으나, 북일정상회담이 빠른 시일 내 실현될 수 있도록 직접 고위급 협의를 실행할 것’
6. 14. (수)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 2023년 6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 원(연락사무소 약 102.5억 원+종합지원센터 약 344.5억 원)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
	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섭 국방부 장관, 美 국방부 정책차관 접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섭 국방부 장관,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와 주요 동맹현안에 대해 의견 교환 - 이 장관은 콜린 칼 정책차관이 재임 기간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참여하는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워싱턴선언’의 의미를

일자	구분	주요 내용
6. 14. (수)	한·미	<p>평가하며, 한·미 국방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다양한 토의식연습(TTX) 시행, 미 전략자산 전개 확대와 같은 미(美)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이행해 나가야 함을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린 칼 정책차관은 북한의 선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미(美)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 간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환기하였으며, 최근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의 진전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
	한·미·일	<p>〈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방일(6.14.~15.)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안보실장 회담(6.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공조와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NSC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합의 - 조 실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측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강조하고, 일본 측으로부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가 계속 공유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6.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쉐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북한 문제, △지역 안보 정세, △한·미·일 협력 방안을 주제로 협의를 갖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3국 간 공조를 한층 공고히 만들어가기로 합의 - 미측이 제안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준비 논의도 이어 나가기로 하였으며, 2월 개최된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기초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등 다양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3국 간 협력을 계속 활성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합치 • 한·미 안보실장 회담(6.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쉐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관계, 북한·북핵 문제, 지역 및 글로벌 공조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 - 양측은 △핵협의그룹(NCG),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 등 4월 한·미 정상회담의 여러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 △이를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인 한미관계를 발전,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 간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부, '러와 전략적 협조' 北 발언에 "러시아와의 협력 모든 국가 우려"(정레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북한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일반론적으로 말하겠다"면서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한(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항상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
	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링컨 국무장관,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통화... '소통 유지'의 중요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국무부, 미·중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오산과 갈등을 방지하며 양자가 글로벌 이슈에 맞서기 위해 소통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미국이 갈등은 물론 잠재적 협력이 가능한 영역에서도 외교적 관여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부연 - 중국 외교부, 미·중관계를 둘러싼 핵심 사안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관심사에 대한 엄숙한 입장을 밝혔다"며 "미국은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중단해야 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

일자	구분	주요 내용
6. 14. (수)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팔레스타인 정상회담(중국 베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진핑 주석,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 △팔레스타인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평화대화를 위한 방향성 유지 필요 - 팔레스타인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며,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음. • 리창 총리, 팔레스타인 대통령과 면담(6.15., 중국 베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팔레스타인과 함께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함께 수행해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양국의 FTA 협상을 빠르게 추진해야 할 것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팔라우 정상회담(일본 도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팔라우의 이해와 신뢰에 감사 - 팔라우, 후쿠시마를 방문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면밀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틴 대통령, 전쟁 담당 기자간담회서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서방의 무기 고갈 주장… ‘탄약 우회 지원설’ 제기된 한국 무기 고갈될 것이라 언급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툼 투건하트 영국 보안 담당 장관, 영국을 방문한 탕평 대만 디지털 담당 정무위원(장관급)과 회동…중국 반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의 기존 외교 정책을 깨는 것으로, 영국의 하급(주니어) 장관들은 대만의 상대방들과 회동하나 고위(시니어) 장관들은 대만 관리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관례 - 투건하트 장관은 2년 전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 유린에 대한 주장을 제기, 중국 정부로부터 제재 당한 바 있으며, 회동은 상호 안보 이익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부는 두 장관의 회동을 확인하지 않음. - 영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성명(6.18.)을 통해, “이 움직임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분리주의 세력에 대만 독립이라는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중국에 대한 극도의 내정간섭으로 간주, 중국 정부는 “영국 측에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단호한 대응을 만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
6. 15. (목)	북한-대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시진핑 중국 주석 생일 기념 축전 발송(6.15.)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진핑 주석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려정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중화의 부흥실현을 위한 투쟁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함. • 국방성 대변인, 한미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 관련 경고입장 발표(조선중앙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북한을 겨냥한 화력격멸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야기시키는 괴뢰군 당국의 도발적이며 무책임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발표 - “우리 무력은 적들의 그 어떤 형태의 시위성 행동과 도발에도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尹 대통령,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 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연합훈련인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은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실시 - 올해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개최되는 국가급 훈련으로,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역대 최대규모로 실시 - 이번 훈련에는 우리 측의 F-35A, K9 자주포, 미측의 F-16, 그레이이글 무인기 등 첨단전력 610여 대와 71개 부대 2,500여 명의 한미 장병이 참가 -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한 실기동·실사격 훈련으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점검

일자	구분	주요 내용
6. 15. (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아세안 관련 한·중 양자회담 추진 계획 관련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지 않아” (외교부 정례브리핑) • 합참, “北,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두 발 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 7시 25분부터 7시 37분까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하였으며, 각각 780여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 - 北, 오후 6시 50분경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한·미 화력격멸훈련 관련 입장문 발표 후 미사일 발사
	한·미·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금일 소위 ‘경고입장’을 발표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금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지역과 국제 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
	한·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한·일 경제안보대화 개최(일본 도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윤중 경제안보비서관, 일본 다카무라 야스오 국가안전보장국 내각심의회 수석 대표로 참석 - △핵심·신기술,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경제적 강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 - 핵심·신기술에서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양자·차세대 통신 분야의 기술 협력과 인력 교류, 회복력 있는 핵심 광물과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부 ‘2023 인신매매 보고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는 한국을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했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 - 보고서는 “(북한은) 기존의 정치 탄압시스템의 일부인 수용소 및 노동 단련대, 성인 및 아동의 대규모 동원, 해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부과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패턴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국가가 후원하는 강제 노동으로 얻은 수익금을 정부 운영에 사용했다”고 설명 • 재무부, 북한 미사일 개발을 위한 부품 구매 및 조달에 관여한 북한인 부부 추가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 남성 최철민(45), 여성 최은정(45) 부부 제재 목록에 추가 - 재무부에 따르면 최철민은 북한 제2자연과학원(SANS)의 중국 지사 대표로, 북한 무기 거래 당국 및 중국 국적자 등과 협력해 북한 탄도미사일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등 다양한 품목들을 구매 및 조달, SANS와 협력해 1천 명 이상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을 추진 및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 단체를 지원 - 또한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최은정은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 업체와의 업무와 관련된 남편의 출장에 동행하는 등 도움을 줬다고 재무부는 설명 - 재무부는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부품을 불법적으로 수입하기 위해 중국과 이란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성,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세부 내용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시 24분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11분 가량 비행하여 19시 35분경 이시카와현 헤구라섬 북서쪽 약 250km 지점의 일본 EEZ 내 낙하, 비행거리는 약 850km, 최고고도는 약 50km로 추정 - 19시 36분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11분 가량 비행하여 19시 47분에 유사 지점에 낙하, 비행거리는 약 900km, 최고고도는 약 50km로 추정

일자	구분	주요 내용
6. 15. (목)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 냉전 이후 처음으로 전술핵 벨라루스에 배치하며 '핵 위협' 수위 높여, 유럽의 핵전쟁 우려 증폭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11차 대러시아 제재 명단서 중국·홍콩 기반 기업 5곳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초 유럽의 대러 11차 제재에 중국·홍콩 기반 기업 8개가 포함, 브뤼셀에서 중국 외교관들과 회담 후 그중 5개 제재 명단에서 제외 - EU 외교관들, "중국 기업들이 수출 금지 유럽 제품을 지속적으로 러시아 군 바이어들에게 판매할 경우 곧바로 제재 명단에 추가할 것"
6. 16. (금)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영세 통일부 장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北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100% 확신"(CBS 라디오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소하더라도 배상액을 실제로 받아내기는 어려우나, 승소 판결 자체로 큰 의미가 있어" - "손해배상 채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확보하고 언젠가 집행하겠다는 것은 北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면에서 매우 의미있어" - "하노이 노딜 이후 경색된 남·북, 북·미 관계를 주도하려고 北이 韓과 美를 대상으로 가스라이팅한 것" - "지난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일부 시기 '정상회담 뒷돈' 이야기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 지사 시절 北과 대화하려고 뭘 보냈는지 말았는지 하는 수사가 진행 중...수사 결과를 봐야 하지만 이런 식의 비상식적 대화 및 관여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속 가능하지 않아" -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이상설 관련) "가족력이 있어 (건강이) 그리 좋은 상태로 보이지 않는데 확실한 정보가 없어" - (中 싱하이밍 대사 추방 주장 관련) "잘못된 부분에서는 지적하고 앞으로 中과 대사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어" 통일부, "지난달 北 주민 추정 시신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해 화장"(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이 현재까지 시신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할 예정" 합참, "北 주장 우주발사체 일부 인양해 국방과학연구소 등 전문기관에서 정밀 분석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형의 2단부로 추정되며, 원통형 잔해 표면에는 '천마'라는 글자와 함께 하늘을 나는 말의 모습을 형상화한 마크가 확인 - 北이 천리마 1형에 탑재했다고 주장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비롯해 1, 3단부는 미발견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北,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때면 피해자 행세"(제8차 울란바토르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은 국제법 질서 자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전 입증 안 되면 수입금지 해제할 수 없어"(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하는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함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수산물 수입은 이와 별개" - "방류 오염수 안전함 입증되었다고 해도...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한·미·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일 3국 안보실장 명의, 北 미사일 규탄 공동성명 발표(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 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 - "北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역, 국제평화와 안보, 국제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줘" - "北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발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물자의 획득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대북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모든 국가가 완전히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줘" - "3국 안보실장은 한·미·일 협력이 북한의 도발로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北이 지속적 도발이 아닌 외교의 길을 택해야 한다는 믿음을 공유" -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배가한다는 의지"

일자	구분	주요 내용
6. 16. (금)	한·아세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진 외교부 장관, 방한 중인 아세안 사무총장 면담 -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 및 아세안 관련 7월 외교장관회의와 9월 정상회의 준비 논의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핵추진 잠수함 '미시건함' 부산 입항...워싱턴선언 이행 차원 - 핵 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SSGN) '미시건함',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으며 이는 워싱턴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라는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
	미·일·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일·필리핀 안보 담당 고위급 관료 회의 개최(일본 도쿄) -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장관, 에두아르도 아노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 지역 안보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및 공동성명 발표 - 공동성명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와 관련해 광범위한 지역 안보 도전을 논의했다"면서 "대만해협에 걸쳐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설명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진핑 주석, 빌 게이츠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 면담(중국 베이징) - '중국의 힘으로 패권을 추구하는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것...중국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국의 최대 관심사이자, 세계평화에도 기여하는 일 ...중국은 공공의 발전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 함께 하겠다' - '빌게이츠는 베이징에서 올 해 처음으로 만난 '미국 친구'...중국은 미국에 의지하고 있으며, 양국 국민 간의 지속적인 우정을 희망한다'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제공하려는 미국에 엄중한 항의 전달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동 시간대에 대해, F-16이 우크라이나를 비행하거나 자국 인보를 위협할 경우, 군사기술적 대응이 있을 것임을 강조 - 푸틴 대통령은 SPIEF 연설에서 "레오파르트 전차가 불타고 있고, F-16도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비난하며, "NATO가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커지고 있다. F-16이 우크라이나 밖에 배치돼 전투에 투입될 경우 우리는 이들을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지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6.15.) 강력 규탄
6. 17. (토)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소집(6.16., 당중앙위 본부) 보도 - 김정은 위원장 참석 하에 당중앙위 제8기 제6차, 제7차 전원회의 결정 집행을 위한 2023년 상반기 경제부문 등 각 부문의 사업정형을 총화 대책하고, 당의 강화발전과 국가건설, 변화된 국제정세에 대처하는 국가외교 및 국방전략에 대한 문제 등을 토의·결정하는 것을 의정으로 상정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O, 냉전 후 첫 '집단방위 계획' 수립 추진... 러 공격 대비 - 냉전 종식 후 지난 수십 년간 러시아를 실존 위협으로 여기지 않던 NATO 내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집단방위 계획 수립 필요성이 제기 - NATO 자체가 핵공유를 근간으로 하는 '집단방위 체제'를 상징하나, 지상·해상·공중 방어 전략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역계획이 수립되는 건 사실상 처음으로, 상징적 의미를 넘어선 군사안보 동맹으로서의 성격이 짙어질 것으로 예측 • G7 교통장관들, 일본에서의 G7교통장관회의에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교통 인프라 복구 등 지원에 협력 대응 합의 • 아프리카 7개국 지도자로 구성된 아프리카평화사절단,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방문하여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 -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조속한 전쟁 종식과 협상을 촉구했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철수 없이는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일축... 당일 키이우 공습 후에도 사절단이 러시아 방문 일정을 강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프리카 정상들의 결정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 - 대표단은 푸틴 대통령과도 회동하여 종전을 촉구했으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일자	구분	주요 내용
6. 17. (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사절단의 균형 잡힌 입장은 환영하며, 아프리카 국가와의 우호 관계 강화를 지지한다면서도, 우크라이나 탓에 사태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 거듭 표명
6. 18. (일)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두산위인 칭송 국제축전 조직위원회 확대회의 진행(6.8., 화상회의) 보도 - 5년간의 사업정형 총화 및 위원회 보선 진행 - 조국해방전쟁 승리 70주년, 공화국 창건 75주년 경축을 위한 지역별 사업계획 통보 및 토의
	미·중	<p><美 블링컨 국무장관 방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中 외교장관 회담(6.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 미중관계는 현재 최악의 상황...미국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미국이 중국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길 희망 - 양국은 2022년 11월 개최된 정상회담의 기초를 따라 차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진전된 대화와 협력, 교류를 할 것을 합의 • 블링컨 장관-왕이 당중앙위 외사판공실 주임 회담(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 현재 미중관계가 최악의 상황인 것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시각 때문...양국 관계의 안정적·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평화공존, 윈윈협력이 핵심 과제 - 中, 미국은 중국이 다른 서구 국가들처럼 패권을 추구한다는 인식을 버려야 함...더이상 '중국위협론'을 논하지 말 것 - 中,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블록 대결 조성하고,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공존을 훼손...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정책이 아닌, 배타적이고 분열적인 정책 • 블링컨 장관, 시진핑 주석 면담(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진핑 주석, '국제사회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원하지 않고, 두 국가 중 어느 한 편을 고르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중국이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고, 미국에 도전하지 않고자 하는 것처럼, 미국도 중국의 권위와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 블링컨 장관, '미국은 신냉전을 원하지 않는다...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어느 한쪽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중국의 시스템 변화를 원하지 않으며, 미국의 동맹은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며, 중국과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 미 국무부 방중 결과 발표 및 블링컨 장관 기자회견(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리에서 미·중 정상들이 논의한 바와 같이 미·중관계를 이끌어갈 원칙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 및 양측 국민 간의 유대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학생, 학자, 기업 간의 인적 교류 강화를 환영 - 국무부, 블링컨 장관이 중국에 불법으로 구금된 미국인 석방을 촉구하고 신장, 티베트, 홍콩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으며, 쿠바에서 이뤄진 중국의 정보 활동에 대해서도 우려 표명 - 또한 펜타닐 위기를 부채질하는 약물 및 물질의 미국 수입 글로벌 흐름을 막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 - 국무부, 양측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 북한의 도발적 행동, 쿠바에서 중국의 정보 활동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포함해 다양한 글로벌 및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열린 의사소통 라인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후속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발표 - 블링컨 장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책임 있게 행동하고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하도록 장려하는 게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의 이해에 부합한다면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특별한 위치에 있다며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
	U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댐 붕괴로 수몰 피해가 발생한 우크라이나 드니프로강 유역의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구호를 시도했으나 러시아 정부가 거부 - 우크라이나 담당 조정관은 러시아 당국이 국제 인도법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원조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거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

일자	구분	주요 내용
6. 18. (일)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 우크라이전 성급한 평화협상 불가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후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위한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재무장 및 공격 순환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 - 7월 NATO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수년간 나토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지원패키지 의결 계획을 발표할 예정
6. 19. (월)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중앙위 제8기 제15차 정치국회의 진행(6.18., 당중앙위 본부청사)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용원(당중앙위 조직비서, 사회) 등 참가 - 당중앙위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에서 제출한 문건을 의정별로 검토, 심의하고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하여 결정서 초안을 최종 완성, 전원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 • 김정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참석(6.16.~18., 당중앙위 본부)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중앙위 제8기 제6차, 제7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목표와 전략전술적 원칙에 따라 국가의 이익과 안전환경을 견결히 수호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국면을 새롭게 상승시키기 위한 2023년의 주요 정책 집행정형을 중간총화하고, 2023년 하반기에 수행할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 결정 - 의정으로 1) 올해 주요 정책집행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나갈 데 대하여, 2)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 조치에 대하여, 3) 각급 인민위원회 일군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 데 대하여, 4) 인민주권 강화에서 나오는 문제에 대하여, 5) 당 규율 건설을 심화시키기 위한 중요 대책에 대하여, 6) 조직문제를 상정하고 전원일치로 가결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北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하지 않은 것은 처음...위성발사 실패 등 성과가 없어 나서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통일부 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수용 경제부장이 교체된 데에는 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측면...경제 분야의 부진한 실적을 극복하기 위해 재기용 추정" • 외교부, 北 노동당 제8기 8차 전원회의 결과 관련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고수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은 '우주산업의 확대발전'과 한미에 대응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라고 했으나, 진정으로 절박한 과제는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北 주민의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 "하루속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비핵화의 길로 복귀해야 할 것" • 합참 "한·미 당국, 북한 정찰위성 재발사 시점 예의주시"(국방부 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사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움" - "(지난 31일 北 군사정찰위성 실패 관련) 北이 스스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 필요"
	중·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창 총리, 독일 방문(6.1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獨 슈타인마이ер 대통령과 회담(6.19.), '중국과 독일 사이에는 근본적인 이익 충돌이 없으며, 중국은 개방과 협력을 옹호...독일은 디커플링과 어떠한 형태의 불록 대결도 반대하며,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며 평화와 발전을 함께 추진할 것' - 제7차 중국-독일 정부 간 협의회 개최, 22개 부문에 대한 양국의 협력 증진 상황에 대해 청취...기후변화와 녹색전환에 대한 협력을 위한 새로운 대화 채널 마련 - 獨 솔츠 총리, '탈위험(de-risking)은 탈중국화(de-sinicization)가 아니다'
U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커 투르크 UN 인권최고대표, 제53차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중·러 관련 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의 국제 인권 보호 시스템에서 북한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방역 규제 해제 흐름 속에 닫힌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 - 중국과 인도에 대해서도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지역 사무소를 뒤흔 하며, 러시아는 인권 분야에서 UN에 협력할 것을 요구 	

일자	구분	주요 내용
6. 19. (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보상할 때까지 대러 제재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 도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 목적을 수정하여 러시아 보상을 촉진하고 제재 대상자들이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 '중립' 이스라엘, 美 압박 속 우크라이나 지원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두고 미국의 압박을 받은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통화 진행, 비살상 무기만을 제공할 것임을 강조 - 한국과 이스라엘, 각각 미국 주도 하에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압박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행보가 변수 가능성이 있을지 주목
6. 20. (화)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덕수 국무총리, "北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 태세 유지... 신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조기에 완벽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해야"(국무회의 모두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흔들어보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드론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안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설치한다는 내용과 사령부 임무와 예하 부서·부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軍 고위 관계자, "北이 서울 상공으로 무인기 1대를 보내면 軍은 10배 이상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보내 휘젓고 다니도록 조치하는 것이 내부적인 의지...9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계획" 통일부, "北 통일전선부 김영철 복귀, 대남대응 강화 취지"(통일부 당국자 기자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역할이 점차 축소됐던 김영철은 지난 18일 종료된 북한 노동당 제8기 8차 전원회의에서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선임 - "비교적 고령임에도, 통일전선부장도 아니고 굳이 고문이라는 자리를 쫓는 것이 그러한 의도가 아닌가" 통일부, 강제노동, 여성권리, 근로권 등 북한인권 세부 분야를 심층 조사한 보고서 공개 예정 (통일부 당국자 기자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인권 상황을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탈북자)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비공개 심층조사 용역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
	한·프	<p><尹대통령 BIE 총회(프랑스) 참석(6.19.~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프랑스 공동 언론 발표(6.20.) [尹 대통령 발표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불 양국 간의 협력은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로 확장돼 나가야 할 것" - "실질적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우주, 항공 등 미래 전략 분야의 협력 모색" -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을 적극 지원" - "北의 핵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 -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韓 차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서 대처해 나갈 것"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발표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법이라는 공동의 약속에 의거해 북한 핵 위기에 결연히 대처하기 위해 프랑스가 韓을 지지한다고 기대해도 좋아" - "北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해야 하고, 명백한 인권침해 역시 지속적으로 단호히 규탄할 것" - "韓의 최근 안보리 진출은 이 (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가 긴밀하게 공조할 기회를 제공해줄 것"

일자	구분	주요 내용
6. 20. (화)	한·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아직 개척되지 않은 다수의 협력 분야, 에너지,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AI), 원전, 우주, 방위, 항공 분야 등을 갖고 있어” - “우리 유대 관계는 특히 젊은층에서 韓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무한한 동경을 보여줘” • BIE 총회 尹 대통령 프레젠테이션(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입하는 관문이자, 대양으로 나아가는 도시” - “70년 전 전쟁으로 황폐화되었던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에 힘입어 첨단 산업과 혁신 기술을 가진 경제 강국으로 변모” - “대한민국은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 - “미래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물려줘야” • 한-프랑스 미래 혁신 세대와의 대화(6.20.) 尹 대통령 모두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에너지와 기후 위기, 보건과 디지털 격차는 세계시민의 자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 - “전 세계 많은 미래세대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며, 새로운 트렌드와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스테이션 F는 국제주의와 혁신의 상징” •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6.21.) 尹 대통령 모두발언 및 마무리 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윤리 규범 제정 위한 국제기구 설립,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 -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UN 산하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 “저는 원래 자유시장주의자…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도 역시 규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상업의 증진, 공업의 발달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 -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가짜뉴스와 거짓선동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 - “공공재라는 측면에서의 디지털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범세계적인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주는 차원에서는 이것이 어떤 유엔에서의 남북문제와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져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디지털에 관한 다양한 법적인 규범적 논의를 하는 국제기구가 필요” • 유럽지역 투자신고식(6.21.) 尹 대통령 모두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지역 첨단기업들이 총 9억 4,000만 불의 韓 투자를 결정…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든 대통령,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난 2008년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첫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내린 뒤 16년 연속 매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 - 바이든 대통령, 의회 송부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존재와 확산”이 자국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행정명령 13466호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발표 • 블링컨 국무장관, “중국, 북핵 견제 약속 없었지만 그렇게 하게 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링컨 장관, 미국 CBS뉴스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의 미사일,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아 “약속은 아니었다”고 답변 - 블링컨 장관, 김정은이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김정은을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데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설명

일자	구분	주요 내용
6. 20. (화)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어 “중국으로선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움직이지 않을 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국가 고문과 외교 정책국장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했고 시 주석에게 좀 더 포괄적으로 말했다”고 부연 • 법무부, “北 불법 취득 암호화페 1억 달러 이상 사용 막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슈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 차관보, 후버연구소 회의에서 “우리의 암호화페 추적 능력과 압류 집행을 통해 1억 달러 이상의 불법 취득 암호화페가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되는 것을 막았다”고 공개 - 이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사이버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고 발표
	미·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방일...미·중회담 결과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을 수행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 외무성 당국자들과 미·중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 및 향후 대중국 정책을 논의 • ‘평화적 목적을 위한 달 및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탐사 및 이용에 대한 협력을 위한 미·일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발효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강 외교부장,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베이징서 각각 파키스탄 합참의장과 회담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과 파키스탄은 전천후(all-weather) 전략적 협력 파트너이며, 강철(ironclad) 우정 - 양국의 전략적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블록 대립에 반대하며, 지역 평화와 안정, 양국의 공동의 이익을 수호해나갈 것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방장관 정례 기자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댐 붕괴에 의한 수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500만 달러 긴급무상자금협력... WFP, 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해 식량 및 식수 공급, 위생 및 보건 분야에 지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우크라이나에 500억 유로(약 7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 결정
6. 21. (수)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영세 장관,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은 명백히 북한에 있어...태도 변화를 촉구”(정전협정 70년 기념 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환영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은 감소하지 않았고, 남북 간 단절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군사적 긴장은 높아가고 있어” - “핵과 미사일이 체제를 지켜줄 것이라는 미망에 빠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고립과 공핍을 자초” - “윤석열 정부는 시대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유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 • 권영세 장관, “北의 행동과 주변 정세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만큼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나가야 할 때”(남북 산림협력 심포지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되는 남북 대치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군사안보적 부담이 덜한 ‘쉬운 접점’을 찾는 일도 필요” - “산림조성·복원, 병해충 공동방제 등 이미 합의한 사업들은 북한이 호응하기만 하면 바로 추진, 北 당국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히 호응해야”
	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방한...미·중회담 결과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외교부 당국자들과 만나 미·중 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 - 이후 기자회견에서 동아태차관보는 “중국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협상 테이블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역량과 책임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했다”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대북 영향력을 지닌 ‘특수한 위치’에 있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복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

일자	구분	주요 내용
6. 21. (수)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장관, G7 외교장관들을 만나 방중결과 공유(영국 런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우크라이나 회복 컨퍼런스 계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EU 대표들을 만나 방중결과 설명 및 중국 문제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 논의 - 또한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 외교부 대변인, 美 바이든 대통령이 中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로 칭한 것에 대해서 '매우 터무니없고 무책임하며, 기본적인 사실과 외교적 예의에 엄중히 위배...중국의 정치적 존엄을 침범한 것으로, 공개적인 정치적 도발'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시다 총리 정례 기자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과 건설적, 안정적 관계 구축을 위해 상호 노력하며, 여러 레벨에서 긴밀하게 의사소통 해나갈 것 -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조기실현할 수 있도록 고위급 협의를 직접 관할하여 진행,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 - 이번 국회에서 5년간 43조 엔의 방위예산 확보 및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을 성립시킬 것 • 일·영 외교장관회담 개최(런던, 우크라이나 복구회의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영 부대 간 협력 원활화 협정'의 조기발효를 위해 긴밀히 연계 - 우크라이나에 공정하고 영속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러제재와 강력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의견 일치 - 중국 및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핵·미사일 문제 및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지속적 연계 • 일·아일랜드 외교장관회담 개최(런던, 우크라이나 복구회의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유지·강화를 위한 연계강화...핵·미사일 문제 및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에 지속적 연계
6. 22. (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실, 한-베 히토류 센터에 "특정국가 대한 반작용 아냐"(대통령 고위관계자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 견제 의도 관련) 특정 국가에 대한 반작용이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식량 위기 등으로 전반적으로 공급망이 불안정한 가운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분야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기 때문" • 외교부, "北, 국제사회의 총의를 받아들여서 불법적인 도발에 막대한 재원을 탕진하는 대신 날로 피폐해지는 민생을 돌보는 데 힘쓸 것을 촉구"(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29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6.19.) 이사회에서 시카고협약 등 국제규범을 위반한 北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정이 만장일치로 채택 - 韓 대표부, 주요 이사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관련 규정 위반을 ICAO가 묵과하는 것은 北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외교부, "한·미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실무그룹' 중심으로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 차단...北의 IT 인력 차명계정을 상당 부분 차단 및 불법 수익 자금 일부 회수"(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의 불법 사이버 외화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국 정부와 관련 민간 업계와의 국제 공조를 강화해나가고, 추가적인 독자제재 지정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갈 예정
	한·베트남	<p>〈尹대통령 베트남 국민방문(6.22.~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베트남 정상회담 및 협정 서명식, 공동언론발표(6.23.) <p>[尹 대통령 모두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에는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 -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화" -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설립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기반을 구축" -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과 장학생 초청을 포함한 교류사업도 확대" - "향후 7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한도를 기존 15억 불에서 20억 불로 확대 갱신... 2030년까지 총 40억 불의 유상원조를 지원할 계획"

일자	구분	주요 내용
6. 22. (목)	한·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은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에 있어 핵심 협력국” - “北의 핵, 미사일은 역내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견인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은 아세안 및 양자 차원 모두에서 공조를 강화” <p>[보 반 트영 주석 모두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 직후 베트남을 아세안 국가 첫 국빈 방문국으로 선택한 것은 尹 대통령과 韓 정부가 양국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는 것” - “베트남은 경제사회 발전 사업과 대외 정책에서 韓을 우선 순위의 중요한 국가로 선정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싶어” - “정치·해외 분야와 관련해 양국 고위급의 상호 방문과 협력을 정기적으로 유지” - “국방·안보 분야에서의 포괄적 동반 관계 구체화하며 방산 분야 기술 이전 및 초국가 범죄 및 테러 방지, 비전통 안보의 대응 협력 등을 추진” - “2030년까지 1500억 달러 교역액을 달성하기로 합의” - “베트남은 한반도 정세를 관심하고 예의주시…한반도의 비핵화에 기여할 준비가 됐다” <p>• 베트남 총리, 당서기장, 국회의장 면담(6.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尹 대통령,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에 걸맞는 최고 수준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 응우옌 푸 쯙 공산당 서기장, “베트남은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 브영 딩 후에 국회의장, “베트남 내 한국 기업과 국민의 권익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 <p>• 국빈 만찬(6.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尹 대통령, “양국은 기존의 경제 협력에 더하여 외교·안보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신재생에너지, 혁신 과학기술 등 새로운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이 보장될 때 양국의 미래도 더 밝아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해” - 尹 대통령, “100년 번영을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하고 사람에 투자해야” - 트영 주석, “尹 대통령 내외의 베트남 방문은 양국이 좋은 친구이자 좋은 파트너, 그리고 좋은 사돈으로 동행하는 중요 여정의 첫 걸음이 될 것”
	미국	<p>• 정보당국, 북한의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 보고서 공개 “北, 이웃국 강압 수단으로 핵무기 활용 가능성 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보국장실(ODNI), 국가정보위원회(NIC)가 올해 1월 작성한 ‘북한: 2030년까지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 보고서를 비밀 해제한 뒤 공개 - NIC, 북한이 ‘강압적(coercive)’, ‘공격적(offensive)’, ‘방어적(defensive)’ 등 세 가지 목적으로 핵무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가운데 강압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 - 이어 “김정은은 국가 안보 우선순위를 달성하는 데 진전을 이루려고 다양한 강압적 수단과 공격적인 위협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는 핵무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한미 대응을 억제할 것으로 믿고 더 큰 재래식 군사 위협을 감당하려고 할 수 있다”고 전망
	중국	<p>• 리창 총리, 마크롱 대통령 접견(파리, 새로운 글로벌 금융협정을 위한 정상회담 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 중국과 프랑스는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책임있는 주요국으로서 공동으로 글로벌 도전에 대처하고, 세계평화와 안정을 추진해야 함…가장 큰 위험은 비협력이며, 가장 큰 숨겨진 안보위협은 비개발 - 佛, 하나의 중국을 지지…프랑스-중국 전략 대화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 <p>• 중국-파키스탄 총리 회담(파리, 새로운 글로벌 금융협정을 위한 정상회담 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과 파키스탄은 전천후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운명공동체의 신시대 건설을 함께 추진할 것 - 중국은 파키스탄의 주권, 독립, 영토보전을 지지하고, 파키스탄은 중국의 국가 주권, 영토 보전을 지지 <p>• 리창 총리, 유럽의회 의장 회담(파리, 새로운 글로벌 금융협정을 위한 정상회담 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연합은 중국의 발전을 제한하거나, 억제할 의도가 없으며, ‘신냉전’과 특정한 진영을 지지하는 것을 반대

일자	구분	주요 내용
6. 22. (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무성, '외무성 관료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는 IAEA 및 제3국 전문가 의견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IAEA에 100만 유로 이상의 로비활동을 진행, IAEA의 보고서는 처음부터 안전하다고 정해져 있었다'는 보도 부정
	일·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프 외교장관회담 개최(파리, 새로운 글로벌 금융협정을 위한 정상회담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 프리깃함의 도교만 기항과 해상·항공자위대와의 공동훈련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것에 의견 일치 중국 및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핵·미사일 문제 및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 대응 등에 대해 지속적 연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만 외교부 보도자료, '피지 정부, 현지 대만 대표부 명칭을 '중화민국 상무 대표단'에서 '타이베이 상무판사처'로 교체 요청'
6. 23. (금)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관련 행사 진행(6.22.)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학생들의 복수결의 모임(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 미제 침략자들의 만행체험자·노동계급·직원원 상봉모임(중앙계급교양관 교양마당)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中,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복송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중 북한이탈주민 강제 복송을 중단하라는 유엔의 권고에도 중국 구금시설에 억류 중인 북한이탈주민 2천여 명의 강제 복송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이 강제 복송되면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으므로 中 정부가 유엔의 권고를 이행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北 당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유튜브 채널 접속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정보원이 '송아'(샬리 파크스)·'유미'(올리비아 나타샤-유미 스페이스 DPRK 데일리)·'NEW DPRK' 등 북한 체제를 선전해온 유튜브 채널 3개의 접속 차단을 요청해온 데 따른 것
	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니 블링컨 美 국무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방중 결과 전화 통화 설명(美 국무부 대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링컨 장관은 정세를 점점 더 불안정하게 하는 北의 행동을 포함해 다양한 양자,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중국 관료들과 논의한 것을 업데이트" "블링컨 장관은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박 장관과 재확인"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美 법무부, 페타닐 원료 생산·유통·판매 등의 혐의로 중국 기업 4개와 중국인 8명 기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中 외교부 대변인, '미국은 책임 전가와 중국에 대한 비방·공격을 중단, 모든 제재 및 자의적 구금을 즉각 중단할 것'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시아 바그너그룹, 러시아 정부의 대응에 반발하며 무장 반란 시도했으나 실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맞서 승리하고 있다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 러시아 국방부가 바그너그룹 후방 캠프 타격 탓에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응징하기 위한 '정의의 행진'을 시작하겠다고 선언, 정부 대응에 반발하며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러시아로 진격을 개시(6.24.)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협상을 통해 바그너그룹의 병력 이동을 중단하기로 결정, 반란 종결(6.24.)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11차 제재안 시행 확정...중국 본토 기업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이사회는 제11차 대러 제재안 시행 확정, 11차 제재의 보완 및 제3국이 러시아로 수출·이전이 금지된 EU산 제품을 수입, 러시아에 재판매하는 행위를 엄정 단속하며 관련 사실 확인시 해당 제품의 제3국 수출이 통제 중국본토 및 홍콩 소재 기업을 포함 중국 기업이 최소 7곳이었던 초안과 달리, 홍콩 소재 기업 3곳만 대상에 포함...중국 본토 기업 포함의 경우, EU의 최대 교육 파트너인 중국 당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EU 내부의 우려 반영하여 수위 조절 	

일자	구분	주요 내용
6. 24. (토)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관련 근로단체들의 복수결의모임 진행(6.23.)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근로자·농근맹원, 여맹일군·여맹원 결의모임 진행
	북한-대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조선중앙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18~19일 방중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중국이 평양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일본, 남조선과 함께 중국이 좋아하지 않는 군사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비난 - 한반도 긴장 격화의 근원은 “가장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집요하게 실행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안전을 엄중히 침해한 미국에 있다”고 비난 - 한반도와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조치와 도발 수위가 고조될 경우, 북한의 대응성 행동조치의 규모와 범위도 보다 압도적이고 공세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장관, G7·EU 외교장관과 전화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G7 회원국 외교장관들 및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와 민간 용병 조직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 관련하여 전화 논의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틴 대통령, ‘제2차 세계대전 종결일’을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승리와 제2차 세계대전 종결일’로 변경하는 법안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 관방장관(6.26.), ‘매우 유감...양국 국민 사이에 쓸데없는 감정적 대립을 만들지 않도록 러시아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6.24.~25.)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최대 지원국인 G7을 비롯, EU, 북미 및 각국 대표 참석 - 7월 중 공식 평화회담 개최 기대 고조...중전 원칙 합의 모색이 목표
6. 25. (일)	북한-대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천일 외무성 부상, 주북 러시아 특명전권대사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러관계 및 지역·국제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 러시아 무장반란 사건이 순조롭게 평정될 것이며 러시아 지도부가 내릴 선택과 결정도 강력히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 - 러시아 군대와 국민이 대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尹대통령, “73년 전 이 땅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미 양국이 흘린 피를 잊어선 안 될 것”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 관람 인사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동맹을 이끌 주역인 미래세대에게 한미동맹의 태동과 발자취, 동맹이 이룩한 눈부신 성과를 정확히 알려줘야” • 권영세 통일부 장관, “정부 재산에 대해 침해가 있는 부분은 추가 소송 절차를 진행할 생각”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이) 불쾌하거나 불편해질 수 있으나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 - “지금 정상회담의 공간이 열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北이 어려워지고 필요가 생기면 의외로 빠른 시간 내 대화 제의에 北이 응할 수 있어” -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얼마든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 - “(김영철 前 北 노동당 대남비서 복귀 관련) 새로운 도발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대미·대일 관계에서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 - “(北 아사자 관련) 인도적 위기가 대규모로 생겼을 경우 우리가 직접 하든 국제기구가 개입하면 이를 통해서 하든 인도적 지원 부분도 생각” - “(북·일대화 관련) 日의 납북자 관련 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할 생각이고, 그런 과정으로 우리와의 대화도 이어질 수 있어”

일자	구분	주요 내용
6. 25. (일)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진 외교부 장관, “中과 착질 이유 없어…한·중 전략적 소통 계속 강화할 것”(연합뉴스TV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중국과 척지고 지낼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는 것” - “계속해서 한중 우호 증진을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 -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해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본 입장” - “(상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발언 관련) 외교관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난 것” - “(美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방중 관련) 핵심은 미·중 관계를 앞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 대립이나 갈등보다는 경쟁과 협력의 관계로 가겠다는 것” - “(러시아 바그너 그룹 무장반란 관련) 이번 사태가 러시아의 국내 정세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 - “(BIE 총회 및 베트남 국민방문 관련) 국면 전환의 분수령, 베트남이 광물과 희토류를 공급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로서 이번에 등장하게 된 것” • 외교부, 더불어민주당 태평양도서국 대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관련 서한 발송에 대해 “객관적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감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의 서한 전달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물론 우리 자체의 안전성 평가 노력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외시키는 것” - “대외적 차원에서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아 유감”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처리되어야”
	미·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든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든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로 러시아에서 벌어진 최근의 사태에 관해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안보·경제·인도적 지원 등 변함없는 미국의 지지 강조 - 젤렌스키 대통령, 장거리 무기 제공 등 국방협력 방안, 7월 예정 NATO 정상회의, ‘글로벌 평화 정상회의’ 준비상황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발표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베트남 외교장관 회담(베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베트남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기념하여,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길 희망’ • 중국-스리랑카 외교장관 회담(베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스리랑카의 경제·사회 발전과 민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조를 제공할 것’…‘스리랑카의 독립과 경제발전, 부채해결을 위한 중국의 지원에 감사’ • 외교부 대변인, 러시아 바그너 그룹의 반란에 대해 ‘러시아의 내정과 관련된 문제…중국은 러시아가 국가적 안정과, 발전·번영을 유지하길 바란다’
	중·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바그너 그룹 무장 반란 직후 중·러 외교차관 베이징에서 회동… 양국 소통 강화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외교부는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관계와 공통 관심사인 국제·지역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으나, 루덴코 차관의 방문이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과 관련이 있는지는 미확인
6. 26. (월)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관련 시·도 군중집회 진행(6.25.)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1일경기장 및 평양시 여러 곳에서 진행된 평양시 군중집회에는 리일환·박태성 당중앙위 비서, 김수길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전승국 내각 부총리, 리두성 당중앙위 부장 등과 평양시 12만여 명의 근로자·청년학생 참여 - 미국이 오늘날까지 “군사적 대결과 핵전쟁 연습에 광분하고 있는 것”은 침략자의 본색을 날낱히 드러내보인 것이라고 비난 - 이외 평안도, 황해도, 자강도, 강원도, 함경도, 양강도, 남포시, 나선시, 개성시 등에서도 군중집회 진행

일자	구분	주요 내용
6. 26. (월)	북한-대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무성 미국연구소 연구보고서(6.25.)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을 “조선침략전쟁의 도발자”이자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로 규정 - 미국은 끊임없는 핵무력 증강과 전쟁연습 소동으로 한반도와 지역을 “핵전쟁 위협의 불도가니속”으로 밀어넣었다고 비난 -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남아있는 한 북한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노력은 보다 가속화될 것이며 주권국가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 “(러시아 바그너 무장반란 관련) 당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통치 체제에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편상욱의 뉴스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군부에 불만을 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 “바그너 그룹을 우크라 전선에서 뺐을 때 이미 러시아군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장 전선 상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 통일부, “개성공단 금강산 지구 내 정부 재산 피해 관련 구체적인 법적 조치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 중”(정례브리핑)
	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북핵대표 통화, “中 건설적 역할 지속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최근 미중 고위급협약에 대해 “北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는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라 평가 - 北의 도발 중단을 위해 앞으로 각종 양자·다자회의 계기에 긴밀한 공조 하에 중과 소통 및 해외노동자 송출과 불법 사이버 활동같은 北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공조하는 방안도 협의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든 대통령, ‘세계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성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든 대통령, 모든 형태의 비인도적인 대우에 대한 미국의 반대와, 고문을 근절하고 고문 생존자들이 치유되고 정의를 찾는 과정에서 그들을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약속 재확인 - 이어 북한에는 정치범수용소를 포함해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과 강제 낙태, 강제 불임과 같은 고문 등 기타 형태의 정부에 의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비열한 징벌에 대한 믿을 만한 보도들이 널리 퍼져있다고 설명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베트남 총리 회담 개최(베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협력, 시장 규제, 항구 건설 등에 대한 상호협력 문서 서명 - 중국, ‘중국은 실질적인 해양협력을 증진시키고, 남중국해에서의 행동강령에 대한 협의를 가속화하며, 현 상황을 악화시킬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음’ - 베트남, ‘중국과의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킬 의향이 있음’ • 왕이 당중앙위 외사판공실 주임, 美 미중관계전국위원회 이사장과 회동(베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 미중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근본 원인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왜곡된 견해 때문… 미국은 중국의 정당한 발전권을 존중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야 - 美 이사장, 미중 관계의 디커플링은 불가능
	중·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 회동,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중국 베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외교부는 양국이 한국전쟁 정전 70년 동안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실현하지 못했으며 각 측의 우려, 특히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한반도 긴장과 대립의 근원이자 문제점이라는 점에 공감했음을 발표…한반도의 평화 안정 수호,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수립은 지역·국제사회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

일자	구분	주요 내용
6. 26. (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룩셈부르크에서의 EU 외교이사회에 앞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러시아의 정치체계가 취약성을 드러내고 군부 권력에 금이 가고 있다고 논평 - 현 사태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요한 결과가 될 것이라면서, 러시아와 같은 핵보유국이 정치적 불안정성에 접어드는 것에 우려 표명...우크라이나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
6. 27. (화)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덕훈(내각 총리), 여러 부문 사업 현지요해 - 원산 철도차량 공장, 문천 강철공장, 천내리 시멘트 공장, 룡성 기계연합기업소, 성천강 전기 공장, 흥남 비료연합기업소 - 강원도 문천시, 함경남도 고원군·정평군·함주군 등 여러 지역 농장의 영농실태 - 검덕지구 살림집 건설장, 단천 발전소 건설장 등 중요 건설대상
	북한-대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주재 북한 상설대표부, 미국의 유네스코 재가입 관련 공보문 발표 - 미국이 여러 번의 유네스코 탈퇴와 회비 지불 중단 결정, 최근의 재가입 시도 등의 변덕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이는 미국이야말로 국제사회의 총의가 반영된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불법무법의 나라이며 미국이 입버릇처럼 외우는 이른바 《규칙에 기초한 질서》라는 것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정당화하기 위한 면사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 있다”고 비난 - 지난 3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이 유네스코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하고 미국의 가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미국의 진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고 주장 - 미국이 유네스코 투표권과 집행이사회 성원국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꼴불견”이며, 유네스코 복구에 앞서 그간 미납부한 회비 등 정치경제적·도덕적 책무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에 기반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정례브리핑)
	한·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 과학기술정보통신부-日 문부과학성, 10여년간 단절했던 과학기술분야 국장급 회담 개최 - 중단된 양국 간 과학기술 정책 교류를 진행하고, 향후 협력을 위한 정례협의체 신설, 양자·우주·바이오·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
	미·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일 확장억제대화 개최(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 - 미 국무부-일 외무성, 확장억제대화(Extended Deterrence Dialogue)를 개최하고 지역 안보, 동맹방위 태세, 핵미사일 방어 정책, 군비 통제 및 위험 감소를 포함한 전략적 억지 문제 논의 - 양측은 미·일 공조를 개선하고 적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로 약속 및 억지력 강화를 위한 3자 및 다자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경제포럼 제14회 뉴챔피언연례총회(일명, 하계 다보스포럼) 개최(중국 댜진) - 리창 총리 개막식 연설, ‘국제사회에 부족한 것은 소외가 아닌 소통, 대립이 아닌 협력, 고립이 아닌 개방, 갈등이 아닌 평화’...중국은 지난 수십년간 세계 경제 성장과 자유무역을 위한 닷 역할을 수행, 앞으로도 세계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강한 역동성을 제공할 것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무역관리령 일부개정령에 대한 정령’ 각의결정 -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여 물품 및 기술 수출시 일반 포괄허가 가능 대상으로 지정하고, 캐치올규제 대상에서 제외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정부,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반란 사태 이후 관련 법 개정 검토 중 -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 전화회의에서 반란 처벌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 방향성은 제시하지 않음. - 바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은 반란 당시 자국에서 탈출한 공직자를 색출 및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 - 동요하는 여론을 진정하기 위해 자국 언론에 ‘쿠데타 표현 금지’, 대신 ‘반란 시도 사용’ 등 보도지침 하달

일자	구분	주요 내용
6. 27. (화)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북한에 나진-하산 철도 운송 확대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러시아-북한 당국 간 위원회 회의에서 나진-하산 공동 전략 프로젝트를 되살리려는 노력을 강조하며, 나진항에서 석탄과 기타 화물을 다루는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러시아에서 무장반란을 일으킨 용병단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에 벨라루스에 있다고 공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그너그룹이 자국에 머무는 것을 환영하며 전투 경험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발언 - 루카셴코 대통령은 바그너 반란 당시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을 사살하려 했으나, 협상을 위해 자신이 설득했다고 주장하며 통화(6.24.) 내용 공개 • 구글, 北 체제 선전용 유튜브 채널 완전 폐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글, “구글은 적용할 수 있는 미국의 제재와 무역 준수 법률을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당사 서비스 약관에 따라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검토 후 우리 정책에 따라 채널을 폐쇄” - 지난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튜브에 국가정보원 요청에 따라 북한 당국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송아’(샬리 파크스), ‘유미’(올리비아 나타샤-유미 스페이스 DPRK 데일리), ‘NEW DPRK’ 채널을 국내에서 접속 차단 요청
6. 28. (수)	북한-대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무성 일본연구소, 일본인 납북자 문제 관련 논평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납치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의 아량과 성의 있는 노력에 의해 이미 되돌릴 수 없이 최종적으로 완전무결하게 해결” - “일본이 실현불가능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전제 조건 없는 일조 수뇌회담’을 희망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하는 일본 당국자의 입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실, “바그너 사태가 완전히 종료됐다고 볼 수 없어…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기자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돌출한 단순한 사건으로 볼 일이 아니야” • 권영세 통일부 장관, “국제사회 의지 모아 北의 납북문제 태도변화 견인”(제10회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유엔 인권결의 등을 통해 납북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의지를 확인” - “6·25전쟁 중 우리 국민 10만여 명을 강제로 납치한 뒤 北에 억류” -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를 비롯한 납북희생자 가족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 • 외교부, 北 불법 금융활동 지원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독자제재 대상 지정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뉴질랜드 총리 회담 개최(베이징),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 교육, 농업, 임업, 방역, 식품안전,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 - WTO와 다자간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시스템과 개방적·포용적인 세계 경제 수호, 강인한 글로벌 공급망 유지의 중요성 재확인 • 중국-몽골 총리 회담 개최(베이징), 교통, 금융, 검역, 언론, 야생동물 보호 등에 대한 양자 협력 문서 서명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기 제3차 회의, ‘대외관계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 - ‘국가기관과 무장 역량, 각 정당과 인민단체, 기업과 사업조직, 기타 사회조직 및 공민은 대외 교류협력에서 국가의 주권, 안전, 존엄성, 명예, 이익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일자	구분	주요 내용
6. 28. (수)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방장관,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의 납치 문제 관련 논평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 모든 납치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 발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사상 처음 EU 예산(3억 유로, 4천300억 원) 투입해 무기 공동구매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집행위원회는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선출기관인 유럽의회 간 '유럽방위산업강화 공동조달법(EDIRPA)' 도입을 위한 3자 협상을 최종 타결 - 공동구매 대상은 원칙적으로 유럽 방산업체로 한정, 제3국산 부품 비율은 35% 미만으로 제한 - 우크라이나를 신속히 지원하는 동시에 각국 재고를 신속히 비축하는 것이 목표
6. 29. (목)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 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6.27.~28.)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덕훈(내각 총리), 박정근·양승호(내각 부총리), 리영식(내각 당위원회 책임비서) 등 참석 - 당중앙위 제8기 제6차, 제7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상반기 사업정형 분석총화 - 당중앙위 제8기 제8차 전원회의가 명시한 투쟁지침에 입각하여 내각과 국가경제기관들의 정책적 과업을 실행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 토의 • 평양시 및 각 도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6.27.~28.)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사업정형 분석총화 및 당중앙위 제8기 제8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투쟁지침을 철저히 집행하여 지역과 단위 발전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과업들을 토의결정 • 연포은실농장과 증평은실농장 사이의 야채 생산을 늘리기 위한 사회주의경쟁 선포모임 진행 (6.28.)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철규(내각 부총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 리두성(당중앙위 부장) 등 참석
	북한-대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쿠바 주석(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으로부터 대통령 재선출 관련 축전 (4.19) 관련 답전 수신(6.22.) 보도 • 북중 우의탑 내부 개작공사 완공 관련 행사 진행(6.28.)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왕야췌 주북 중국대사 등 참석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尹 대통령, 통일부 장관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명, 차관에는 문승현 주태국 대사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에는 김수경 한신대학교 교수 내정 •尹 대통령, "대북억제와 동시에 대화로 北비핵화 진전시켜 나갈 것"(2023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 축사(권영세 통일부 장관 대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석열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연대해 나가면서 北의 핵위협과 도발을 강력하게 억제" - "동시에 '담대한 구상'을 중심으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北의 비핵화를 차근차근 진전 시켜나갈 것" - "새로운 통일미래 비전을 제시해 국내외에 통일 공감대를 새롭게 확산시키고 北의 올바른 변화를 견인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어" -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인류 화해와 통합의 시금석이 될 것" • 박진 외교부 장관,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진정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갈 것" (2023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 기조연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복합위기와 공급망 변화 등 국제질서의 재편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에 더 큰 책임, 더 큰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 -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진정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갈 것" - "국제질서의 재편과 복합위기 속에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은 안보, 경제, 산업을 통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일자	구분	주요 내용
6. 29. (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현동 주미대사, “北위협 대비 한·미 핵협의그룹 첫회의 개최 논의 진전”(특파원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그너 사태가 발생한 직후에는 주말에도 美 고위급 인사와 직접 소통하면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정세의 돌발 변수에 긴밀히 대처” - “北의 위협이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워싱턴 선언에서 도출된 한·미 양국 간의 핵협의그룹, NCG의 첫 회의 개최를 위한 논의가 진전” -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차세대 핵심 신형기술 대화 출범을 위한 협의를 진행” • 황준국 주유엔대사, “안보리 공식회의에서 北 인권문제 논의해야”(北 납치문제 유엔 심포지엄 연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의 전체주의적 억압 체제는 北 핵 개발 문제와 상호불가분의 관계로 궁극적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 - “윤석열 정부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 중심 기조하에 강제 실종 문제를 포함한 北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 •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북·중·러 국경 개방이 언제일지 확실치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는 동향이고 국제 체육대회에 나오려는 동향이 보여”(2023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이 대화로 나오려는 조짐일 수 있어...정부는 北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 -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재시도할 것이고 도발을 계속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어느 한 방향으로 예단할 수 없어”
	한·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조세·관세 협력...‘제3국 공동진출’ 업무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이후 8년 만에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재개 -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9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하고 한일 통화스와프를 복원 - 추경호 부총리,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환·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와 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과 미국 사이에 근본적 다름(profound differences)이 존재하며, 미·중 대화는 이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다룰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는 블링컨 국무장관의 인터뷰에 불만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발언은 국제 관계의 기본적인 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대
	U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북한 납치문제 해결 관련 화상 심포지엄’ 개최... 미국 “북한 인권침해 계속 알릴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공동 주관으로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화상 심포지엄 개최 -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 “북한 정부에 모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호소한다”고면서 “이를 위해 북한은 모든 납치된 사람과 불법 구금된 이들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미국은 자국민이 북한의 강제 실종과 미송환 전쟁포로의 희생자가 된 일본과 한국 등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 - 기조연설에 나선 일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겸 납치문제담당상,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어떠한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발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정상회의 브뤼셀에서 개최(6.29.~30.)...우크라이나 안전보장 기어 방안, 대중국 관계, 유럽 방위력 강화 방안 등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이 참석해 EU-NATO 간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 예정이며,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러시아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 회원국 간 의견교환 예정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무장반란 사태가 푸틴 체제에 깊은 균열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EU는 해당 사태의 후속 상황에 집중

일자	구분	주요 내용
6. 29. (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그너의 쇠퇴(erosion)가 우크라이나는 물론 아프리카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데 푸틴이 아프리카에서 바그너를 통해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 스위스, EU의 새 대러 제재 수용...제재 명단에 바그너 관련 인사도 포함 - 스위스 정부는 성명을 통해 EU가 23일 확정된 11차 대러 제재안과 같은 내용의 제재 대상자 명단을 연방의회에 통보 - 서방국 일각에서는 스위스의 제재가 미온적이고 스위스의 금융 관행으로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지적...스위스 연방정부는 4월 기준 EU 회원국 전체의 제재 대상자 자산동결 실적의 1/3 해당 금액이 스위스의 독자적 동결이었음을 강조하며 제재 성과가 결코 적지 않다고 반박
6. 30. (금)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천강-평남관개 물길공사 완공 보도 - 당의 농촌발전 전략과 관개건설 정책에 따라 2016년 2월부터 착공 - 김덕훈(내각 총리), 주철규(내각 부총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꾼들이 6월 29일에 시찰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北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공식 요청”(장마철 임진강 홍수피해 예방 관련 입장문 발표)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통일부 역할 변해야, 원칙적, 가치지향적 정책 추진” - “변화된 상황에서는 남북 간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고려” - “앞으로 북한이 9·19 군사분야 합의를 충실하게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또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정부도 나름의 입장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문제는 북한 인권뿐 아니라 보편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야” - “북핵 문제, 인권 문제, 또 북한이 호응한다면 경제협력 문제 이런 것들을 삼위일체로 묶어서 우리가 논의하는,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고려” - “통일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다양한 것을 고려” • 국무조정실, “우리 정부가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 논의를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감춘다거나 日의 입장에 동조하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냐”(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
	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국방부, ‘제3차 한미정보통신기술(ICT) 협력위원회’ 개최(미국 하와이) - ‘국방 5세대 이동통신 추진전략’ 및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연합작전 및 훈련 시 국방 5G를 활용하기 위한 시험부대 구축 및 운영 계획을 소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일본 식품 수입규제 완전철폐 검토...일본 정부, 한중에 대해서도 철폐 강력히 요구 주장 - 규제 철폐 후 EU가 후쿠시마현 및 미야기현 식품 등 10개 현(광역자치체) 식품 수입 시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 제출 불필요, 다른 광역자치체 식품의 산지 증명 또한 불필요 -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 규제 폐지 계획이 없음을 밝힌 바 있으나, 일본 정부는 추후 중국과 한국에 대해 규제의 조기 철폐를 강하게 요구할 계획을 발표

II

북한 매체 주요 보도

1. 대 내

■ **조선소년단 창립 77주년 관련 《소년》호 방사포 증정(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6.7.)**

- 노동신문은 전국의 학생소년들이 소년단 창립 77주년을 맞아 《소년》호 방사포를 마련하여 전날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앞마당에서 증정 모임을 가졌다고 7일 보도함.
 - 당 평양시위원회 김수길 책임비서, 리두성 당중앙위 부장 등이 참석하고 문철 청년동맹 중앙위 위원장이 증정사를 진행했으며, 《소년》호 방사포 증정서를 인민군 군관에게 전달함.

■ **당중앙위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6.19.)**

- 노동신문 6월 19일자 1~3면은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하에 진행된 당중앙위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기사를 사진과 함께 게재함.
 - 회의에서는 당중앙위 제8기 제6차, 제7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목표와 전략전술적 원칙에 따라 국가의 이익과 안전환경을 견결히 수호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국면을 새롭게 상승시키기 위한 2023년의 주요 정책 집행 정형을 중간총화하고, 2023년 하반기의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 결정
 - 의정으로 1) 올해 주요 정책집행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나갈 데 대하여, 2)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 조치에 대하여, 3) 각급 인민위원회 일꾼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 데 대하여, 4) 인민주권 강화에서 나오는 문제에 대하여, 5) 당 규율 건설을 심화시키기 위한 중요 대책에 대하여, 6) 조직문제를 상정하고 전원일치로 가결
 - 관련 보고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책동과 반동공세로 인해 국가의 안전환경에 엄중한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 건설과 국익 수호, 경제건설, 문명건설 등을 비롯한 각 방면에서 고무적인 성과들을 쟁취하였다고 선전
 - 반면 경제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결점과 폐단에 대한 분석과 극복 방법들도 언급되었으며, 특히 변화한 국가 안전환경에 부합하는 자위력 강화 및 무장장비의 갱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나타난 간과할 수 없는 결함”을 엄정히 총화
 - 가장 엄중한 결함은 5월 3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해당 사업을 추진한

- 일군들의 무책임성을 비판하였으며 해당 부문 일군과 과학자들이 실패의 원인과 교훈을 분석하고 빠른 시일 안에 재발사할 것에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
- 또한 당규율 건설을 더욱 심화시켜 “강철같은 규율로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 실현과 당의 광범위한 정치활동을 철저히 담보”하며 “당의 결백한 정치기풍을 변함없이 견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보강”을 위한 대책안을 심의에 제기

■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관련 시·도 군중집회 진행(노동신문, 2023.6.26.)

- 노동신문 6월 26일자 1~2면은 6월 25일 진행된 평양시 및 각 도들에서의 군중집회 기사를 사진과 함께 게재함.
 - 평양시, 남포시, 나선시, 개성시, 평안도, 황해도, 자강도, 강원도, 함경도, 양강도 등에서 진행된 군중집회는 미국의 6·25전쟁 발발 책임 및 한·미 당국의 “전쟁도발 책동”을 규탄하는 목적에서 개최
 - 평양시 군중집회에는 리일환·박태성 당중앙위 비서, 김수길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전승국 내각 부총리, 리두성 당중앙위 부장 등과 평양시 12만여 명의 근로자·청년학생이 참여
 - 연설자들은 “미제가 도발한 침략전쟁으로 하여 우리 민족이 뼈아픈 고통과 불행을 겪게 된 데 대하여” 언급하고, “우리 인민은 당의 자위적 국방건설 사상을 받들어 미제를 징벌할 최강의 절대병기, 그 어떤 원썩도 감히 범접 못하게 할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억척같이 틀어쥐었다”고 강조
 - 미국이 오늘날까지 “군사적 대결과 핵전쟁 연습에 광분하고 있는 것”은 침략자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하고,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당의 혁명적 전쟁관점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전민 항전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 것을 독려

■ 내각 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6.29.)

- 노동신문 6월 29일자는 6월 27~28일 진행된 내각 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기사를 게재함.
 - 회의에는 김덕훈 내각 총리, 박정근·양승호 내각 부총리, 리영식 내각 당위원회 책임비서, 내각 당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당중앙위 제8기 제6차·제7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상반기 사업정형을 분석총화
 - 또한 당중앙위 제8기 제8차 전원회의가 명시한 투쟁지침에 입각하여 내각과 국가경제기관들의 정책적 과업을 실행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를 토의
 -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의 지배적 고지인 “알곡고지”를 달성하기 위한 농업 부문의 문제, 주요 공업 부문에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경제 전반에서 생산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문제 등을 논의하고, 내각 당위원회가 국가 경제사령부의 정치적 참모부로서의 방향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에 대하여 지적

■ **평양시 및 각 도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6.29.)**

- 노동신문 6월 29일자는 6월 27~28일 진행된 평양시와 각 도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기사를 게재함.
 - 회의에서는 상반기 사업정형을 분석총화하고 당중앙위 제8기 제8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투쟁지침을 철저히 집행하여 지역과 단위 발전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과업들을 토의결정
 - 평양시 당전원회의에서는 생태환경 개선과 시민생활을 향상시키는 사업 등을 논의하였으며, 황해도 및 평안북도 회의에서는 2023년 농업생산 계획을 경제발전의 첫 번째 고지로 정한 당의 의도에 맞게 과학농사 열풍을 고조시키고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방도 등을 논의
 - 이외의 도·시 당전원회의에서도 당중앙위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방도들을 논의하였으며, 하반기 주요 정책집행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할 것에 대한 결의를 다짐

2. 대 외

■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 담화(조선중앙통신, 2023.6.1.)**

- 조선중앙통신은 6월 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한 것을 비난하는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의 담화를 게재함.
 - 김 부부장은 이미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았으므로 이러한 규탄은 “자가당착의 궤변”이고, “우리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억지론리는 우리 국가의 우주리용 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부당하게 억압하는 분명코 날강도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
 - 또한 “미국은 주권국가의 위성 발사와 우주개발 권리를 무턱대고 부정하고 걸고들기 전에 대결광증으로 달아오른 머리를 식히고 유엔헌장과 우주조약의 조항들을 다시 한 번 똑똑히 들여다 보아야”하며, 미국의 행동은 “적반하장격이며 어불성설”이라고 비난
 - “우리의 주권적 권리와 리익을 수호해나가는 데서 우리는 그 무엇이라도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군사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궤도에 정확히 진입하여 임무 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 김선경 외무성 부상 담화(조선중앙통신, 2023.6.1.)

- 조선중앙통신은 6월 1일 김선경 외무성 부상의 한·미·일 해상차단훈련 비난 담화를 게재함.
 - 김 부상은 한국과 미국이 이번 훈련이 방어적이고 순수한 전파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해도 “특정한 국가에 대한 전면적인 금수조치와 선제공격 준비를 완비하기 위한 극히 위험한 군사연습이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며, “우리 주변 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한 다목적 성격”이라고 주장
 - “우리 국가를 상대로 그 어떤 적대적인 봉쇄행위를 기도하거나 우리의 신성한 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려 든다면 공화국 무력은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 지역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적대행 위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피력

■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 담화(조선중앙통신, 2023.6.2.)

- 조선중앙통신은 6월 2일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비난 성명을 발표한 것을 규탄배격하는 담화를 게재함.
 - 조 국장은 주권평등, 자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이 유엔 설립의 기초이자 유엔 헌장의 기본정신이라며 유엔 사무총장은 비난 “원인에 대해 타당성 있게 설명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군사적 위협에 대한 논리적이고 당위적인 반응이며 자주권과 령토 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주권국가의 보편적인 방위적 권리 행사”이며 북한은 “주권적 권리를 계속 당당하게 행사”할 것임을 천명

■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 담화(조선중앙통신, 2023.6.4.)

- 조선중앙통신은 6월 4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한 사실을 비난하는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의 담화를 게재함.
 - 김 부부장은 유엔 안보리가 “개별적 국가의 정치적 부속물로 작동”하고 있으며,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문제시하는 데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며 이를 가장 불공정하고 편견적이며 내정 간섭적인 주권 침해행위로 강력히 규탄 배격”함.
 - 위성 발사는 “이미 한계선을 넘어선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한 응당한 대응조치이며 자주권과 령토 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권 행사”이며, “주권국가의 모든 합법적 권리들을 행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조치 들을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주장

■ **김정은, 러시아 국경절 기념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6.12.)**

- 노동신문은 6월 12일 러시아의 국경절을 맞이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보내는 축전 전문을 게재함.
 - 축전은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 수행에 총매진하고 있는 귀국 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고” 있다며 “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린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승화발전 시켜나가는 것은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임을 천명하였으며, “조로 사이의 전략적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해나갈 용의를 확인”함.

■ **김정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70회 생일 기념 축전(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6.15.)**

- 노동신문은 6월 15일 시진핑 주석의 70회 생일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이 보내는 축전 전문을 게재함.
 - 축전은 시진핑의 영도로 “당의 권위가 더욱 높아지고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 건설목표가 빛나게 달성되었으며 중국의 종합적 국력과 국제적 지위는 비상이 강화”되었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려정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했으며, “부흥실현을 위한 투쟁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함.

■ **국방성 대변인, 한미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 관련 경고입장 발표(조선중앙통신, 2023.6.15.)**

- 조선중앙통신은 국방성 대변인이 6월 15일 한미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 대해 강경한 입장 발표한 것을 게재함.
 - 대변인은 훈련이 금년에 5번이나 진행되었다며,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야기시키는 괴뢰 군당국의 도발적이며 무책임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엄중히 경고”하였으며, “우리 무력은 적들의 그 어떤 형태의 시위성 행동과 도발에도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조선중앙통신, 2023.6.24.)**

- 조선중앙통신은 6월 24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의 중국 관련 발언에 대한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의 담화를 게재함.
 - 6월 18~19일 방중한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중국이 평양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위치에 있다”, “중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일본, 남조선과 함께 중국이 좋아하지 않는 군사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지적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늘어놓았다”고 비난

- 한반도 긴장 격화의 근원은 결코 북한이나 주변국가가 아니며, “가장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집요하게 실행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안전을 엄중히 침해한 미국”에 있고 근본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군사적 긴장과 대립 상황은 “절대로 해소될 수 없다”고 주장
- 미국의 군사적 조치와 도발 수위가 고조될 경우, 북한의 대응성 행동조치의 규모와 범위도 보다 압도적이고 공세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

■ **외무성 미국연구소, 6·25전쟁 관련 미국 비난 연구보고서 발표(노동신문, 2023.6.26.)**

- 노동신문은 6월 26일 외무성 미국연구소가 미국의 6·25전쟁 책임 관련하여 전날 발표한 보고서를 게재함.
 - 6·25전쟁은 창건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던 북한을 없애버리고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를 제패하려는 흥심 하에 미국이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도발한 철두철미 침략전쟁”이었다고 주장
 -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남한 지역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이승만 정부와 결탁하여 전면전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조선침략전쟁 계획을 최종 완성한 데 기초하여 남조선 괴뢰군을 내몰아 전면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 침략전쟁의 도발자, 방화범”이라고 비난
 - 또한 미국은 6·25전쟁의 참패에서 교훈을 찾는 대신 정전 직후부터 현재까지 아시아와 세계제패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핵무력 증가와 전쟁연습 소동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을 핵전쟁 위협의 불도가니 속에 깊숙이 밀어넣었다”고 주장
 -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남아있는 한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 안전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 노력은 보다 가속화될 것이며 주권국가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도 계속될 것이라고 선언

■ **유네스코 주재 북한 상설대표부, 미국의 유네스코 재가입 관련 공보문 발표 (조선중앙통신, 2023.6.27.)**

- 조선중앙통신은 6월 27일 미국의 유네스코 재가입 시도를 비난하는 유네스코 주재 북한 상설대표부 공보문을 게재함.
 - 미국이 1984년에 유네스코를 탈퇴하였으며, 2003년에 재가입한 후에도 2011년

- 부터 분담금 납부를 중단하고 2018년 다시 한번 탈퇴한 것을 두고 “국제기구를 여관방 드나들듯 하는” 변덕스러운 행태라고 지적
- 미국이 이외에도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 바 있으며 수많은 국제협정과 합의도 파기한 적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미국이야말로 국제사회의 총의가 반영된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불법무법의 나라이며 미국이 입버릇처럼 외우는 이른바 《규칙에 기초한 질서》라는 것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정당화하기 위한 면사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 있다”고 비난
 - 지난 3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이 유네스코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도 가입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은 미국의 진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고 주장
 - 미국이 재가입과 함께 유네스코 투표권과 집행이사회 성원국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꼴불견”이며, 유네스코 복귀에 앞서 그간 “기구를 자기의 사영 회사처럼 치부해온 저들의 잘못에 대해 통절히 반성”하고 연체된 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정치경제적·도덕적 책무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

■ **외무성 일본연구소, 납치 문제 관련 일본 비난 논평 발표(조선중앙통신, 2023.6.28.)**

- 조선중앙통신은 6월 28일 외무성 일본연구소가 납치 문제와 관련하여 전날 일본을 비난한 논평을 게재함.
 - 논평은 일본이 납치 문제 관련하여 미국, 유럽연합, 호주 등과 유엔에서 화상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해당 토론회는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영상에 먹칠을 하고 집단적인 압박 분위기를 조성해보려는 적대세력들의 단말마적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
 - 일제강점기 당시 납치와 학살, 위안부 문제를 일으킨 일본이 납치와 인권을 논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의 극치이며 력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하고, 일본이 주장하는 납치 문제는 “우리의 아량과 성의 있는 노력에 의해 이미 되돌릴 수 없이 최종적으로 완전무결하게 해결”되었다고 주장
 - 일본이 납치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논의하려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전제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일본 당국자의 입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
 - 또한 유엔은 더 이상 “정치모략 선전마당”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선제공격 능력 보유를 주장하는 일본과 이를 적극 부추기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미국을 심판해야 한다고 요구